

‘민주주의역사누리터’, 첫 삽도 전에 정체성 논란

광주교육청 타당성 조사 보고회

5·18 등 광주민주주의 세계화 사업
정확한 부지·예산규모 빠져 ‘빈축’
참석자, 추상적 사업 설명 지적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33번째 공약인 민주주의역사누리터가 착수보고회 단계부터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용역기관과 시교육청과의 소통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책국장 등을 포함해 실무추진단과 외부자문단 등이 참석, 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 수행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건립은 이 교육감의 ‘5·18 전국(세계)화’ 관련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전체 공약 가운데 33번째 사업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오프라인 교육·체험 공간으로, 지역 유관단체와 연대해 교육자료를 개발하거나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올해 안에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본예산을 통과한 연구용역비 1억원 가운데 총 9300여만원이 연구 용역을 맡은



19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조선대학교 측에 전달됐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용역 사업은 이견 큰 책임연구원(조선대 초빙교수)의 총괄 아래 내년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사업의 개요 및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민주주의역사누리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교육관 건립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용역”이라며 “민주주의역사누리터 건립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인재를 만드는 데 포인트가 있다. 광주지역 학생과 시민, 타 지역민들도 와서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크게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두 축으로 진행된다”며 “광주민주주의의 역사를 광주학생독립운동 이전 의병활동, 동학농민혁명, 3·1운동 등 민족해방운동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농민쟁의 등으로까지 폭넓게 확대하려 한다.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전시와 시민 소통·교류 공간 마련 등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옆 부지를 활용해 누리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다만 정확한 부지나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원 측은 다른 사례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곧바로 추상적인 사업 설명뿐이라는 지적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질의자로 참석한 박미선 전남대 교수는 “전국 최초 ‘민주주의 역사 교육관’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역사 자료 전시로는 타 시도교육청의 역사관, 문화관과의 차별점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 광주만의 특수한 민주주의를 소개하겠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보편성 속에서 광주만의 특수성을 드러내겠다는 것인지 등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리터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청과 연구원 간 이견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며 “연구용역 이전에 미래의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청소년 중심시설인 만큼 청소년 위주의 공청회도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용역에 관한 교육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이어졌다.

최영순 시교육청 정책국장등은 “민주주의역사누리터는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안타깝게도 착수보고회에서는 그 대상과 교육의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교육청 정책팀과 용역 발주처 간 소통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사업의 정체성이나 규모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지난 9일에서야 계약이 이뤄져 여러 진행 과정에서 미흡하게 보이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예산 규모나 장소에 대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진 상태지만,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돼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엔 어렵다. 다음 중간보고회에서는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태섭 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오는 8월 말께 1차 보고회가 열릴 계획이다. 오늘 나온 의견들이 다음 보고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발주처 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정부 탄압에 오히려 시민단체 회원 늘어났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110명 ‘급증’

보수 언론과 정부로부터 약정서, 후원금 사용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로 가장한 비즈니스’라며 연일 공격받은 시민단체에 오히려 가입과 후원이 쇄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에 대한 비방과 탄압이 본격화되자, 회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모임’을 지키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된 것이다.

19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 신규 가입한 회원과 탈퇴한 회원이 4~6명 정도로 엇비슷하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된 5월에는 신규 후원회원이 18명으로 늘었고, 특히 6월은 이날까지 신규 회원 가입자가 7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올해는 21명이 탈퇴했으나 110명이 가입하며 시민모임을 지지하는 이들

이 늘고 있다. 한때 후원회원을 잠시 중단했던 유종천(52)씨는 이번에 후원 신청서에 추천인을 ‘윤석열’로 표기해 다시 가입했다. 유씨는 “그렇게 고생해서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만들어 냈는데 오히려 탄압까지 받는 상황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부인도 회원인데, 가족이나 어려운 때 회원 한 사람이라도 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후원회원 가입을 자청했다. 이 교수는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에 대해 ‘어느 나라 정부냐’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100년 전 역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외세로부터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후원회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보수언론 등에서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소송당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원고들과 맺은 약정서, 후원금 사용 문제를 두고 시민모임을 표적으로 한 비판 기사를 연달아 쏟아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가짜 시민단체를 뿌리 뽑겠다고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극우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시민모임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주지역 8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꾸로 피해자 배상 판결에 앞장선 시민단체 탄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혜인 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